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참석

-김도훈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1. 출장 내역

-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김도훈
- 출장기간: 2010. 8. 31(화) - 2010. 9. 3(금)
- 출장지역: 일본 동경
- 출장목적: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참석

2. 활동 보고

(1) 1일차 회의: 2010. 9. 1

- 3국 대표들의 인사와 회의 일정 채택
- 논의 분야: 관세 감축, 협력 관련 이슈 (에너지 및 자원, 소비자 보호, 수산업, 산업협력 등)

○ 관세분야 관련, 3국 정부대표들의 토론이 있는 후 산업계 및 학계의 comment 기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한중일 FTA의 기본 원칙을 발표

- 한중일 FTA는 3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3국 사이의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이러한 장벽들 가운데는 관세, 비관세장벽, 정부 규제 등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들 사이의 상관행도 외국상품과 외국기업들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둘째, 지금 각국이 “민감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민감성을 논의할 때에도 이들 산업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 산업들이 민감성을 이유로 시장개방에 저항하는 정도를 낮추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이러한 방법으로는 협상 당시에 양허 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대가로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등 협상에서의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각국이 민감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보다는 무역구제 장치, 혹은 국내에서의 산업지원 보완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떤 경우든 각국이 민감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첫 번째 원칙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 셋째, 한중일 FTA의 협상 방식, 개방 방식 등을 논의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로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한중일 3국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단견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민감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각국이 민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부분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에다 반드시 이들 민감 분야가 사회적 약자인지를 (예를 들면, 소규모 농민 영위 산업, 중소기업 영위 산업)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대기업이 영위하는 산

업, 특히 국영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을 민감 분야로 고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2) 2일차 회의: 2010. 9. 2

○ 논의 분야: 산업협력, 협력 이슈 (SPS, TBT, 식품 안전 등), 비관세장벽,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 지적재산권, E-commerce 등

○ 산업협력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현재 특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향후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중소기업 협력, 기술협력 등의 형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비관세 장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이 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의 폐쇄적인 유통관행, 상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이는 민간의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의 상관행도 반경쟁적인 요소가 있으면 정부(경쟁당국)가 나서서 이를 경쟁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므로, 한중일 FTA의 협상 분야에 경쟁정책을 포함시킨다면, 수입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혹은 반경쟁적인) 유통관행, 상관행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원산지 규정을 협상할 때에도 향후 한중일 FTA에 동아시아 지역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함.

(3) 3일차 회의: 2010. 9. 3

○ 논의 분야: 경쟁정책,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정부조달, 노동, 환경

○ 경쟁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 2일차 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정책을 통해 시장개방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 의미에서 3국 경쟁당국 사이에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전체적인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 그 협의체를 통하여 상대방 국가의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협정의 결과를 각국이 발표할 때 상대방 국가 언어로도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논의가 시장개방의 수준을 낮추는 새로운 보호적 조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g하였음.

(4) 종합 평가

○ 아직 3개국 정부 대표 모두 협상의 틀을 만들어간다는 공동연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중국은 협상 내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분야가 많았고, 일본은 자국의 이해관계 (특히 수출, 투자 면에서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정리했을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음.

○ 우리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고 전체 시장개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많이 내놓은 편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았다고 판단됨.

○ 금년 12월 초에 중국 위해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중국측 제안이 있었음.